



기획재정부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5. 20.(금) 10:00	배포 일시	2022. 5. 20.(금) 09:00
담당 부서	개발금융국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8750)
	녹색기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전종현 (jj2276@korea.kr) 사무관 이현지 (hjlee8300@korea.kr) 연구원 김예은 (climadip@korea.kr)

제3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 산업은행 GCF 인증기구 재인증 승인

- 6개 개도국 대상, 3.3억불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승인

- 제32차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이사회가 ‘22.5.16(월) ~ 5.19(목)간 앤티가 바부다*(Antigua and Barbuda)에서 개최되었다.

*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영연방 섬나라로 기후변화 위기에 특히 취약한 군소도서 개발국그룹(SIDS,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을 대표하여 GCF 이사직 수임중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개요 >

- ◇ 설립목적: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지원
- ◇ 설립년도: '1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GCF 설립에 합의
→ '13년 한국 송도에서 사무국이 출범
- ◇ 재원: (초기재원) 103억불 (1차 재원보충) 100억불
* 우리나라는 총 3억불 공여
- ◇ 이사회 구성: 선진국·개도국 각각 이사 12명, 대리이사 12명 (총 48명)
- (이사회 개최) 1년에 3/4회 개최, 현재 공동의장은 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 금번 이사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면회의로, 그동안 화상으로 회의가 진행되며 상대적으로 진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정책 안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GCF 사업 제안서에 대한 약식 승인절차 개편안을 승인하였다.

- 아울러, 산업은행의 GCF 인증기구로의 재인증을 승인한 것을 비롯하여, 3.3억불 규모의 6개 개도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사업 5 건을 승인하였다.

[KDB산업은행 재인증]

- 이사회는 GCF 인증기구*로서 활동 기한이 만료되는 산업은행과 미국 소재 비영리단체인 국제보호협회(CI)의 재인증을 승인하였다.

* GCF는 전문성과 현지 이해도가 높은 기관을 인증기구로 지정하고, 이러한 인증 기구를 통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개발·추진 중

- 산업은행의 재인증은 그간 GCF 인증기구로서 활동 내역과 친환경 포트폴리오로의 전환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이사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 산업은행은 현재 GCF 사무국에 제출한 3개 후보사업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GCF 인증기구로서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사업 승인]

-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4건*의 신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사업과 1건**의 既승인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을 승인하여, 총 6개 개도국에 GCF 자금 3.3억불이 지원될 예정이다.

- * ①바누아투 지역사회 기반 기후복원력 사업
- ②기후변화 : 갈라파고스의 새로운 진화적 도전
- ③인도 E-모빌리티 금융 프로그램
- ④파키스탄 분산형 태양광 사업

** 케냐·세네갈 기후친화적 조리방법 보급

- 해당 사업에는 중남미개발은행(CAF), 파키스탄 JS Bank의 공동 금융지원 (Co-financing)이 포함되어 총 14억불이 투자되는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 그 결과, GCF 추진사업은 총 196건, 총 사업규모는 390억불(GCF 지원액 105억불)로 확대되어,

- 총 약 20억 톤 규모의 온실가스가 감축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 내 약 6.14억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약식승인절차 개편안 승인]

□ 아울러, 이사회는 기후변화 위기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업 제안서에 대한 약식승인절차* 개편안을 승인하였다.

* **Simplified Approval Process** : 규모 10백만불 이하이고 환경·사회 관련 위험이 낮으면서, 향후 규모 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간소화하는 제도

- 이번 결정으로, 약식승인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대상 규모가 10백만불에서 25백만불로 확대되었고, 사업 제안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컨셉노트가 자발적 제출로 완화되는 등 서류 제출·심사요건이 간소화 되었다.

- 향후 보다 다양한 GCF 인증기구들이 동 제도를 활용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국(LDCs)과 군소도서개발국(SIDS)의 기후대응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의 김경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이사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엔티가 바부다 정부와 GCF 사무국에 감사를 표하고,

- GCF의 개도국 지원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약식승인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약식승인절차 개편안의 승인을 적극 지원하였다.
- 아울러, 개도국의 기후적응 분야 수요에 비해 실질적인 지원과 재원 조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사회 차원에서 GCF의 기후적응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다.

[향후 계획]

- 한국정부는 앞으로도 세계 최대의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자리잡은 GCF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내 기관 및 기업의 GCF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차기 GCF 이사회는 ‘22.7.17(일)~20(수),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고 1

GCF 인증기구 개요

① (GCF 인증기구) GCF는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구를 인증 기구로 지정하고 GCF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권한을 부여

* 인증기구만이 GCF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업 추진·관리책임을 지기 때문에 GCF 사업 추진시 인증기구의 역할이 중요

○ (대상) 개도국기구, 국제기구, 민간금융기구 등 다양하게 고려

- GCF는 수원국 국가 주도성 강화를 위해 **Direct Access***를 강조

* 수원국이 국내기관·지역기관을 통해 다른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수령·지출하는 권한을 보유

○ (심사내용) ①GCF에의 기여 방안, ②희망 프로젝트 범위·규모, ③기본·특별 수탁기준*, ④환경·사회세이프가드**, ⑤양성평등 등

* 인증기구가 되기 위한 기본역량(금융지원 능력, 회계, 내부감사 등) 및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프로젝트 관리, on-lending/blending 등)

** (ESS) 환경·사회적 risk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

○ (절차) ①인증지원서 온라인 제출* → ②사무국 1차 심사 →

③인증패널 2차 심사 → ④GCF 이사회 승인 → ⑤협약** 체결

* 영문으로 약 300여종의 자료 및 증빙서류, 프로젝트 수행실적 등을 제출

** 인증기본협약(AMA: Accreditation Master Agreement) :GCF 재원 사용 관련 규정 등 GCF와 인증기관간 맺는 기본 협약

② (인증기구 현황) '22.5월 기준 총 113개 기구가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 기관은 산업은행('16.12월 승인), KOICA('21.7월 승인) 2개

참고 2

제32차 GCF 이사회 승인 사업

사업명	인증 기구	국가	분류	GCF 요청액 (백만불)	공동 금융 지원 (백만불)
바누아투 지역사회 기반 기후복원력 사업	세이브더칠드런 호주(SCA)	바누아투	적응 공공	26.2 (무상공여)	6.5
기후변화: 갈라파고스의 새로운 진화적 도전	중남미개발은행 (CAF)	에콰도르	교차 공공	65.3 (무상공여 34.7 차관 30.5)	52.3
인도 E-모빌리티 금융 프로그램*	맥쿼리 대체자산 관리 유한공사 (MAAML)	인도	감축 민간	200.0 (지분투자)	1,297.0
파키스탄 분산형 태양광 사업	JS Bank	파키스탄	감축 민간	10.0 (무상공여 1.0 보증 9.0)	44.0
케냐·세네갈 기후친화적 조리방법 보급	독일 국제협력공사 (GIZ)	케냐, 세네갈	감축 공공	23.8 (무상공여)	
지원요청 총액(백만불)				325.2	1,400.0

* GCF 재원 및 상업투자자 자본 등으로 E-모빌리티 금융 플랫폼을 설립하고, 전기차 소유자·사업자·충전소 운영자 대상 금융 솔루션 제공